

경관보전직불 예산 삭감… 전남광주 농가 지원 축소 우려

지역 신청 7959ha·58억7000만원…전국 수요 37% 차지
내년 정부 예산 120억…28.7% 줄어 신청액에도 못 미쳐
전국 대비 39억 부족…사업면적 배정 과정서 진통 예고

전남광주지역 농가가 내년도 경관보전 직불사업으로 신청한 면적이 전국의 36%를 차지했지만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8.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신청액보다 편성 예산이 39억원가량 부족해 사업 의존도가 높은 전남광주 농가의 지원 축소가 우려된다.

27일 농업축산식품부가 국회 신장식의 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지역의 2027년도 경관보전직불사업 신청 면적은 7958.9ha, 신청액은 58억7006만원으

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947.2ha에 58억 6007만원을 신청했다. 광주는 11.8ha, 9990만원이다. 전남과 광주를 합한 신청면적은 전국 2만2022.7ha의 36.1%, 신청액은 전체 158억9816만원의 36.9%에 달한다. 전국 시·도 가운데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유채와 메밀,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이나 밀·보리·이탈리안라 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을 집단 재배하는

시도	2027년 신청	
	면적(㎡)	금액(천원)
합계	220,226,949	5,898,157
대구	131,148	11,147
인천	33,568	2,853
광주	117,533	9,990
대전	49,001	4,165
강원	2,057,522	74,070
충북	503,261	22,379
충남	5,818,584	494,579
전북	113,400,399	8,669,122
전남	79,471,854	5,860,070
경북	991,132	58,513
경남	1,058,338	76,239
제주	16,594,610	615,024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축제와 농촌관광, 도농교류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경관보전직불사업 예산안은 120억100만원

으로 올해 168억3000만원보다 48억2900만원, 28.7% 감소했다. 전국 농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금액과 비교해도 38억 9716만원 부족하다. 신청액의 75.5%만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신청면적 전부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워 시·도별 배정 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남광주는 전국 신청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 감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원 대상 면적도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올해 2만4000ha였던 사업 계획 면적을 내년 1만6770ha로 7230ha 줄였다. 세부적으로 경관작물은 1만5000ha에서 1만970ha, 준경관작물은 6000ha에서 4200ha, 준경관초지는 3000ha에서 1600ha로 각각 감

소한다.

내년도 전국 신청 면적은 정부 계획보다 5252.7ha 많다. 전남광주지역 신청면적만 정부가 계획한 전국 사업 면적의 47.5%에 해당해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상당수 신청 농지가 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면적과 예산을 줄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수요가 정부 계획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 경관작물 재배를 준비한 농가의 경영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농촌관광과 지역축제를 연계한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식 의원은 농가와 지방정부의 실제 신청 수요조차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으로 농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국회 예산심

의 과정에서 사업 수요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사업지구 전체 면적의 재배성공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기상 여건과 재배·관리 이행 결과에 따라 달라져 예산 불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농민이 종자값과 작업비를 먼저 들어 경관작물을 심는 사업에서, 집행잔액만을 이유로 다음 해 참여 면적부터 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권장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해 온 농가가 정책에 협조하고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최소한 유효 신청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복원하고, 기상 피해 등 농민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은 최근 의회 광주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0분 도시 상상하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광역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전남·광주 ‘60분 생활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모색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60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광역철도와 광역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은 최근 의회 광주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0분 도시 상상하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광역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확대되고 지역 간 교통수요가 달라짐에 따라 새로운 광역교통체계의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

통합특별시의회 정책토론회… 광역철도망·올타 패스 논의
광역철도·버스·BRT 연계와 환승체계 강화 필요성 제시

해 마련됐다.

이날 윤희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도시수석은 “민선 9기 교통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주제로 통합특별시 교통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조진상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60분 생활권’의 첫걸음, 광역철도망 구축을 주제로 전남과 광주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형민 광주교통공사 감사처장은 ‘올타 패스 구현과 플랫폼 제안’을 통해 대중교

통 통합 이용과 교통정보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교통약자 이동권과 통합 교통플랫폼, 지역 간 연결성, 녹색교통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통합특별시가 우선 추진해야 할 광역교통 과제를 살펴보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변화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강 위원장은 60분 도시가 단순히 지역

간 이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넘어 전남과 광주의 주요 거점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광역철도와 광역버스, BRT 등 교통수단 간 연계와 환승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문가와 시민 사회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에 따른 변화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갖춘 교통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수협 공판장 등 수입 수산물 비중 높아”

문금주 “어가 소득 하락… 어민 경영난 가중”



문 의원은 수협 수산물이 국내 산지 가격과 어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품목별 맞춤형 관리와 도매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급식에서 국내산 공급을 확대하고 수협의 국내 수산물 판로 개척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수협이 수입 수산물 유통에 안주하면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수협은 국내산 판로 확대와 공공급식 지원 등 실질적인 어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수협중앙회 공판장과 노량진수산시장, 급식사업부 등 주요 유통망에서 수입 수산물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수협이 수입산 유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사진)이 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중앙회 공판장의 수입산 취급 비중은 물량 기준 2021년 37%(1만7328t)에서 올해 8월 43%(9417t)로 상승했다.

강서공판장은 수입산 비중이 54%로 전체 취급 물량의 절반을 넘어섰고, 가락동공판장도 46%에 달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수입산 비중은 2021년 27%에서 올해 8월 34%로 높아졌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거래액의 43%를 차지했다.

학교 등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수협 급식사업부의 수입산 취급 비중도 같은 기간 37%에서 41%로 확대됐다. 수협은 한정된 급식 예산으로 단가가 낮은 수입산 수요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공 유통망에서 국내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달라진 섬박람회, 가족 단위 관람객 사로잡았다

추석 당일 6만7000명 방문
개막 이후 일일 ‘최다 기록’
체험·참여형 콘텐츠 호평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추석 당일에 만6만7000명이 방문하는 등 콘텐츠 강화로 본격적인 흥행 기도를 달리고 있다.

27일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지난 25일 귀성객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일일 최다 관객인 6만7000명이 방문했고, 이어 26일에도 약 6만명이 찾아 연휴이틀 연속 박람회장이 북적였다.

지난 24일부터 새롭게 선보인 체험 콘텐츠와 참여형 이벤트에 대해 추석 연휴를 맞아 마련한 입장 할인 혜택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데 한몫했다.

주제제에서는 박람회 마스코트 ‘다섬이’를 활용한 AI 도슨트가 관람객들의 눈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박람회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길을 끌었다. 관람객이 궁금한 내용을 직접 묻고 설명을 들으며 전시가 담고 있는 의미와 메시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제에서는 O/X 퀴즈와 실제 드론 조종을 결합한 ‘드론 조종사 체험’이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얻었으며, 해양 생태계의 ‘실타래놀이’와 ‘자식놀이’도 가

족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실타래놀이’는 섬과 섬을 이어가듯 실을 연결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재미를 더했다. 전시관 밖에서도 ‘다섬이 열차’와 빼빼로·마임·버스커 퍼포먼스가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4개 전시관의 보물을 찾아 인증샷을 찍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보물을 찾아라’에도 많은 참여가 이어졌다.

연휴의 절정은 26일 주행사장 열린무대에서 열린 K-POP 콘서트였다. 낮부터 전시관을 둘러본 관람객들이 해 질 녘 열린 무대로 모여들면서 잔디밭과 계단식 객석이 일찌감치 채워졌고,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QWER, 원위, 체리필터 세 밴드의 라이브 무대가 90분간 이어졌다.

김중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대폭 보강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대 관람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남은 기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박람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olbul@gwangnam.co.kr

문예준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대해야”

특별교통수단 운전인력 부족·낮은 운행률 지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예준 의원(사진)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실질적인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운전인력과 운영 예산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앞에서 열린 ‘2027년 전남광주지역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광주장애인자별철폐연대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은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자립생활권, 평생교육권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권리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2027년도 본예산에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의원은 연대 발언에서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려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특



별교통수단이 지방부족뿐 아니라 운전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은 차량을 확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확보된 차량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운전인력과 운영 예산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의 단순한 이동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일상생활과 교육, 노동,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기반”이라며 “장애인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비롯한 기본권이 후퇴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